



양 수 길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상임대표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증세 없는 복지’ 딜레마의 대책은 사회복지 기술

UN을 중심으로 협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위협들과 대응어젠다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생각해 보니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떨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남북통일의 재정 문제를 생각하면 경제성장 잠재력의 개선이 중요하고 동시에 어렵기 짝이 없다. 또 경제 성장에 따르는 온실가스 및 기타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의 배출을 감축해나갈 수 없다. 경제가 양극화되면서 이에 따라 사회도 양극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일로(一路)에 있다.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분배의 악화, 중산층의 붕괴 등 제반 사회적 문제가 오로지 악화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이 계속되어도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악화되고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저하되어 OECD 내 최하위권이고 자살률로는 최상위 국가가 되

기에 이르렀다. 경이적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이제 ‘경제발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제들이 상호 충돌한다. 한 가지를 풀자니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상호보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박근혜대통령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국정운영의 최고 지표로 ‘국민이 행복한 선진 경제’를 내세웠다. ‘국민 행복’을 국가발전의 궁극적 목표로 선정한 것이 훌륭하다. 역대 정부가 모두 그러했듯이 현 정부도 경제성장을 국정운영의 거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민이 행복한 선진 경제’는 은연 중 사회복지가 그 자체로서 경제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적 가치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국정운영 지표는 매우 참신 하면서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는 선택이라고 생

각된다. 당연히 동 지표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사회복지의 확충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국정 운영의 틀 속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제가 서로 충돌한다. 이것이 현 정부가 직면해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핵심이고 딜레마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딜레마의 해법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워왔으나 증세(增稅)에 대한 효과적 대안(代案)을 못 찾아 복지라는 목표 자체의 비중을 낮추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흔히 새로운 기술에서 해법을 찾았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산업의 고도화도 기본적으로 기술 혁신에 기인한다. 이제는 우리의 절박(acute)한 사회복지 딜레마에도 이러한 해법을 모색할 단계에 도달했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혁신 능력을 우리가 직면한 딜레마의 극복을 위해 발휘해야 한다. 사실 박근혜대통령 자신에 이에 대한 처방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창조경제가 그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창조경제란 원래 어느 사회에나 잠재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창의성을 작동시키는 생태계를 말한다. 박근혜대통령의 창조경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특정 부문을 발전시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고자 할 때 그러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창달해 운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히 ICT 등 첨단기술 및 문화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구상의 핵심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성장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창조경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 딜레마의 극복을 위해서도 창조경제를 ‘발동’시켜야 한다. ‘사회복지 창조경제’라고나 할까. 이것을 구상하고 가

동해야하는 것이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며 글로벌하게 기술진보가 가속되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가 놀라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발전을 선도하는 나라의 하나다. 이들 신기술은 보건, 교육, 에너지 등 하부구조적 서비스 내지 공공서비스 비용을 낚날이 낮추어주고 있다. 즉 ‘증세 없는 복지’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다. 원격의료, MOOC, 스마트그리드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말하자면 사회복지기술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보급,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의미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하고 또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혁신도 연구, 활용해야 한다. 원격의료의 도입에 대한 의료업계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비즈니스 모델 및 제도혁신이 한 가지 예가 된다. 이들 모두를 합쳐 ‘사회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회기술은 융합적 기술이고 박근혜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로의 열쇠이고 또 창조경제의 중심에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여러 분야에 포진하고 있는 창의적이고 근면한 고급 전문가들이다. 이제 이들을 산업경쟁력을 위한 연구에만 동원하지 말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딜레마를 타개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경제에도 동원해야한다. 국가적 연구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블루프린트와 전략이 제시되고 대책이 강구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융합적 개방적 연구플랫폼을 설계하고 제시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몫이라고 하겠다. 연구
복지